

## 목 차

###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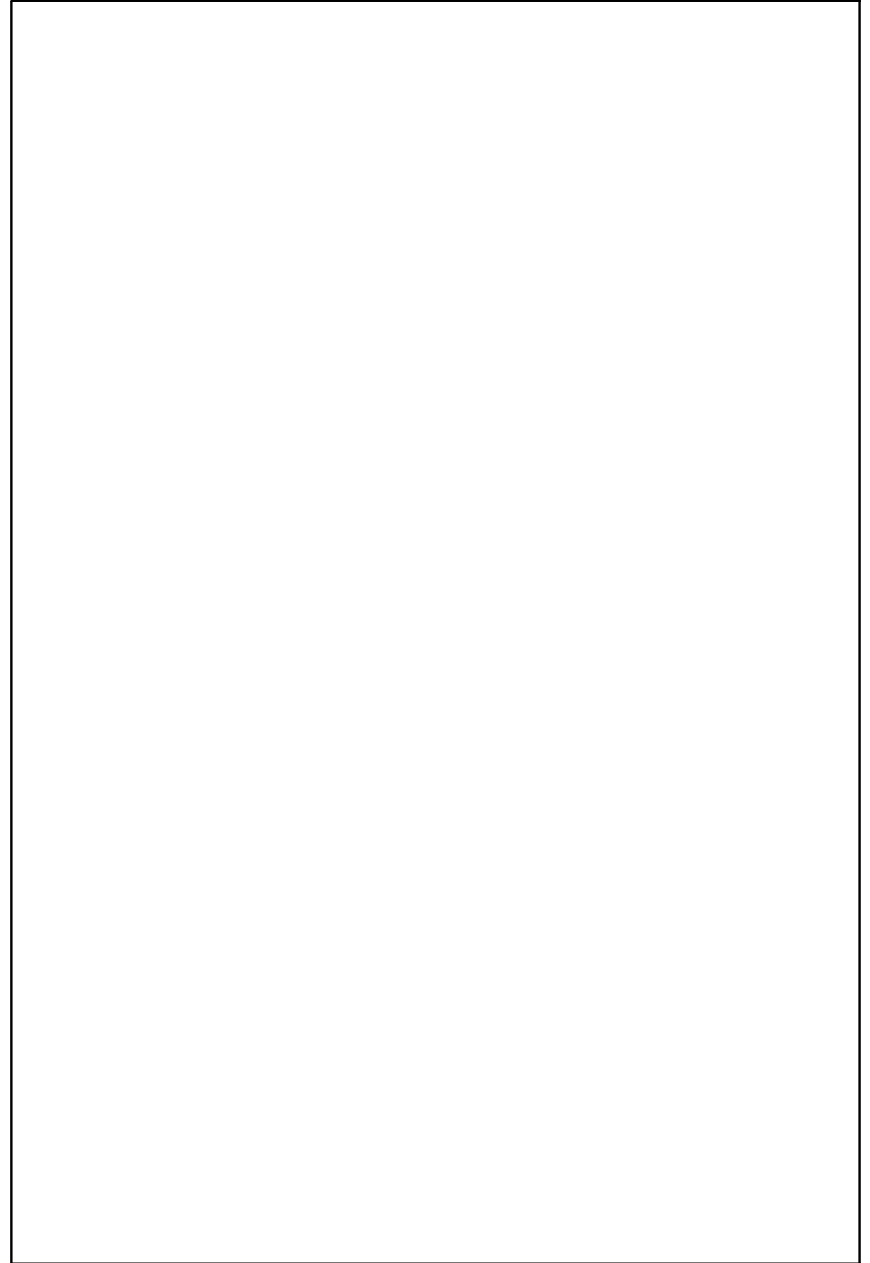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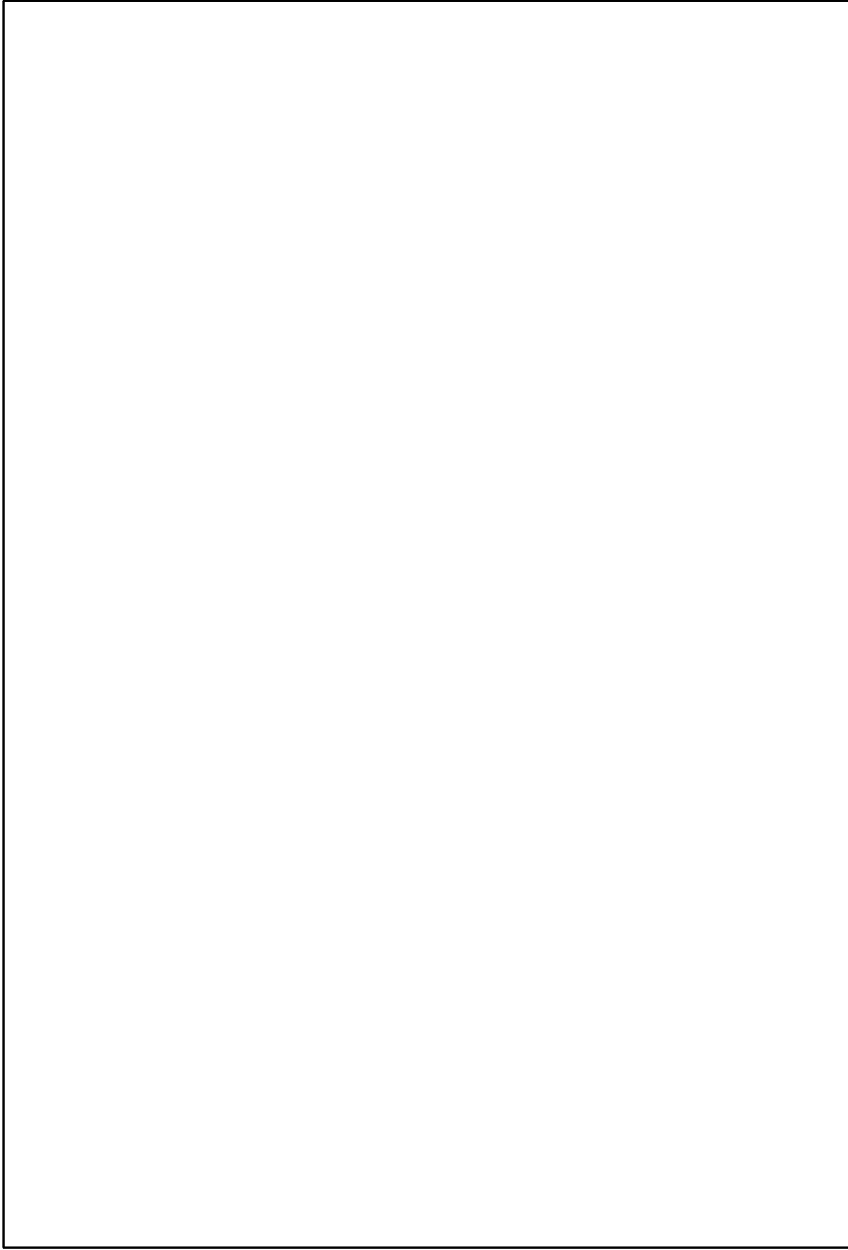
# 사회복지정책의제

2010. 4. 23.

2010년 6월 2일에 있을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이하여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을 정책화하여 후보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자함.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 장애인복지관 개소 대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확대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불평등 해소 필요
- 재가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년 서울 인천 경북 전남 시범사업 수행
- 중증장애인의 가족 부담완화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확충
-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최소 시 군에 개소씩은 설치 운영되어야 하고 기존에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이라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분관 설치 등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
-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 생애주기 다각적 방면으로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 내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총체적이며 체계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대상자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용이함 특히 사회복지이용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이용 활용도가 높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필요성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 헌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스스로가 과중한 업무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은 일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 아울러 세계속에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아래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종사자의 평균급여액은 월 천원으로 대상자의 이상이 호봉이상임을 감안했을 경우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체 평균급여는 천원으로 각 호봉그룹별 월평균 급여의 차이는 만원 정도로 한 호봉간 월급여가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여러 직군을 포괄한 급여라 하더라도 호봉 사이의 평균연봉이 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급여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급여이외의 수당이나 복리후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간의 실질적인 급여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혀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1〉 호봉그룹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

호봉그룹	평균	빈도	표준편차	백분율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
1-5호봉	1,518,298	44,906	242,290	57.7%	1,531,972
6-10호봉	1,906,703	21,510	375,675	27.6%	1,952,606
11-15호봉	2,198,485	6,356	361,463	8.2%	2,216,437
16-20호봉	2,542,204	2,899	382,110	3.7%	2,542,311
21호봉이상	2,900,834	2,144	498,480	2.8%	2,843,643
합계	1,757,451	77,814	458,092	100.0%	2,321,769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값은 지방공무원 보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호봉별 평균값에 대한 호봉그룹별 평균을 계산한 것임 표본 차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 것임  
 자료 :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위와같이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 년 이후 매년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을 시달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지침 년부터 년째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높은 이직률 종사자 사기저하 서비스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2〉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도별	복지부 권고(24.5%)	경기도 반영
2005	전년도 대비 5% 인상	전년도 대비 5% 인상
2006	전년도 대비 6% 인상	전년도 대비 6% 인상
2007	전년도 대비 6.5% 인상	전년도 대비 6.5% 인상
2008	전년도 대비 7% 인상	전년도 대비 3.5% 인상
2009	연봉제 전환(3% 인상효과)	'08년 수준으로 동결
2010	전년도 대비 3% 인상	'09년 수준으로 동결

자료 : 2010 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 대안제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복지부지침 반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현재 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육공무원 특수학교교육공무원 일반기업체 등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지원 받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원공무원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제 조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도입을 통한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출산 양육 대안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일원화**

사회복지라는 동일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기본급 봉급 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상이한 차별적 구조로 사회복지 분야 내에서도 이직률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별 유형별 에 따른 업무 특성을 반영한 차등은 수당으로 두되 기본 임금체계는 일원화 되어야 한다

## 재단과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

### 필요성

경기복지재단은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복지시설 평가 및 지표개발 복지시설 인증의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사 연구와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할 목적으로 2011년도 말에 출범했다 더불어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 개 단체 개사업 이 일부재단에 이관되었다 이관절차는 초기단계부터 경기도 직능단체들과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어 진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민간단체와 마찰이 우려되어 사뭇 옥상 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재단은 직능단체와의 사업과 기능의 중복 재단과 도 사이의 전달체계 문제 보조금 지원기관에 따른 수직구조 등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과 예산의 규모는 확연하게 증가하였으나 직능단체 대다수가 수년간 보조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총량을 늘려나가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등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를 한다고 하니 전체 직능단체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일부만 재단에서 지원 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형태의 직능단체의 경우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 현황 및 문제점

2011년도 재단이 출범되면서 복지건강국의 예산 중 표 과 같이 노인복지사업 개 사회복지정책분야 개 장애인분야 개 사업 등 개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재단이 이관되었다 출범 이래 재단이 단순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직능단체가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 연구 각종 복지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사업에 있어서는 다수의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진행함 따라 기존 직능단체의 경우 예산문제로 재단 공모사업 통해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민간네트워크의 대표라 할 수 있으나 재단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조금은 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논의나 추진은 도와 진행됨에 따라 이중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표 에 의하면 단체별로 적게는 소액 단위사업부터 많게는 단체별 보조금 전액을 재단에서 교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에 사회복지 직능단체 전체를 포괄하거나 다시 도의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계속되는 예산동결로 인하여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 대안제시

재단으로 이관된 경기도 직능단체 보조금 도로 환원 장기적으로 동결된 사회복지 직능단체 예산의 현실화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직적 논의구조가 아닌 수평적 논의구조가 필요 직능단체와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재단의 고유사업만을 육성 필요 정책연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 복지자원연계 네트워크 등 관주도가 아닌 민 관의 네트워크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 필요

표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지원예산

단체명	사업명	년예산 천원
총계 개단체 개사업		
사회복지분야 개단체 개사업 소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도 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주간 사업비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지원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훈련 사업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운영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교육	
노인복지분야 개단체 개사업 소계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실버인력뱅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조성	
	실버인력뱅크 관리자 교육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지원 광역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	
치매미술치료협회	치매노인 건강프로그램	
장애인복지분야 개단체 개 사업 소계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청	
	장애인 재활정보통신망 운영	
	장애인 재택고용사업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후원결연사업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장애인 종합민원상담 센터	
	장애인 종합민원상담 센터 북부	
	종합민원 상담용 차량운영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 워크숍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심부름센터 지원본부 운영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점자 소식지 녹음테이프 제작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교실	
경기도농아인협회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농아가정어린이집 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직업재활센터운영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장애인 결혼상담센터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경기도장애인부모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경기도신장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행복한동행		장애인 직업개발연구센터 운영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훈련 사업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사업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	
경기재활봉사대		장애인 재활승마 운영	

## 경기도 자체 복지예산 확충

###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양극화 신빈곤층의 발생 및 증가 등은 여전히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주민의 복지욕구는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 및 지방정부에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복지예산은 바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충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주민의 삶의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데서 더욱 중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으며 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제주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반면 지방예산의 세출총액으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는 절대액인 인당 세출예산액은 가장 낮으며 사회보장비 비율과 인당 사회보장지출비용 역시 전국 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위로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년 광역자치단체 재정예산지표 비교

지역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부담액(천원)	1인당 세출예산액(천원)	사회복지예산비중(%)
경기도	59.3	519	887	23.0
경남도	34.2	504	1,462	23.7
제주특별자치도	25.7	841	3,936	14.0
충북도	25.1	390	1,621	24.1
충남도	24	385	1,641	22.7
경북도	21.7	348	1,650	25.4
강원도	20.8	417	1,916	19.8
전북도	17.3	317	1,734	29.3
전남도	11.5	275	2,318	23.3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ofin.mogaha.go.kr>)

복지재정의 수준이나 시설분포 복지급여 수준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이남 이북간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복지부문에 대한 발전의지를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크게 관계없이 결정되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차이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격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여 급증하는 지역간 불평등과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원 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대안제시

#### 사회보장비의 예산비중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한다

현재의 경기도 예산중 도의 재정자립도 대비 도민세율수입과 지출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비교했을 때 복지수준이 취약한 편이다 현재의 지방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수준을 상승시키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도민의 복지발전 수준의 정상화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복지 분야공약의 실천의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 도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격차를 해소한다

도내 남부 북부간의 격차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도 차원에서 복지기본선을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간 벌어지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행정구역별로 복지격차가 심화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수준이 현격히 차등됨을 방지하여 모든 주민들이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필요성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인 사회복지종사자는 여타의 조직과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이다 그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본질 때문인데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잡하고 일상적인 것이 특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전 규정된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판단과 기술 등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통하여 전달되며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서비스 전달의 질을 좌우지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식과 능력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수는 표 와 표 에서와 같이 생활시설 개소와 이용시설 개소로 생활시설은 전국의 가 이용시설은 가 경기도에 분포해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약 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청 내부자료



경기도내 사회복지종사자수는 약 만 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에 참여한 수는 만 천 여명으로 종사자 인이 년에서 년에 회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교육 참여인원의 중복 등을 제외하면 년 동안 번의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내 각종 직능협회 연합회 등과 각 시설 기관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사회복지종사자 및 최고관리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과정은 각 직능단체 연합회 등에 위 수탁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기관	교육형태	교육내용	교육인원
총 계			15,649명
사회복지협의회	강의	<b>직무교육 (15회)</b> 행정실무교육, 회계교육, spss교육, 파워포인트 교육, 인권교육, 법인운영실무 등	876명
		<b>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6회)</b>	2,137명
		<b>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교육 (67회)</b> (경기복지재단)	1,416명
사회복지사협회	강의	<b>사회복지사 보수교육 (57회)</b>	3,419명
	현장훈련	<b>해외연수 (1회)</b>	24명
경기복지재단	강의	<b>직무교육 (105회)</b> 경영관리, 사례관리, 노인자살예방, 갈등관리, 네트워크 교육 등	5,347명
사회복지관협회	강의	<b>직무교육 (5회)</b> 워크샵, 세미나, 위탁교육(경기복지재단)	1,131명
	현장훈련	<b>해외연수 (2회)</b>	33명
아동복지협회	강의	<b>직무교육 (5회)</b> 워크샵, 연찬회, 보수교육, 사례발표	438명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강의	<b>직무교육 (7회)</b> 워크샵, 보수교육	422명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강의	<b>직무교육 (8회)</b> 워크샵, 연찬회, 회계교육, 호스피스 등	406명

그러나 지방분권화 및 각종 제도 정책의 도입에 따른 **신규 보건복지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어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년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교육은 시행되지만 아직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다소 무리가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지원 등 많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임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효과적인 능력 개발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복리후생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의 유입은 고사하고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계에 투신한 많은 사람을 결국에는 떠나보내고 있는 현실임

### 대안제시

위 현황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이 곧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듯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함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요구하며 지역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능의 공간마련이 필요함

일반 도민의 복지의식 제고 및 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도민 복지교육의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인당 연간 회 이상의 재교육 및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정부지원시설 반 별 인건비 차등지원 건

정부지원시설의 인건비 지원 시 반별 영아반 유아반 차등지원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 발생 장기근속 교사의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아반 담임을 해야 하는 문제발생 인건비 지원비율의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 설치규정 소급적용 건

년 월 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강화된 보육시설의 설치규정에 따르면 인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에는 인당 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인근 놀이터는 이내 설치 단독건물인 경우 층 보육실은 폐쇄하도록 되어 있음

년 월 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도 년 월 일부터 해당 규정에 소급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불가피 시설의 개보수 혹은 정원축소를 해야 함

이미 기존법에 의해 설치기준이 충족돼 인가받고 운영 중인 기존시설들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 변경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해당 보육시설 설치규정의 적용대상에 년 월 일 이전 적법하게 인가되어 설치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제외되는 등 보육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

## 사회복지 전문가양성 체계 도입

### 필요성

다변하는 현대사회에 국민의 삶에 가장 근접하게 또한 다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개인의 의지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단계적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요구됨

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가 기본적 자질을 유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열악한 처우의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교육비용의 지원이 요구됨

### 현황 및 문제점

자격증 취득 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은 정도를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약 10%의 경우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상

철저히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제도에 의하면 사회복지전공자가 아니라도 1급 2급까지 취득할 수 있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만을 준비하며 인간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꾸준히 습득하며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나 자격증 취득 후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사회복지사는 인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단순한 물질적지원만이 아닌 심리적 신체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윤리관과 사명감이 형성되어야만 하나 단순히 시험만을 통해 자격증이 주어짐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의 품위가 격하됨 비전공자도 시험과목 과목 이수시 1급 시험응시자격 부여

장롱면허 또는 자격수당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함이 아닌 개인의 목적 용도로만 여겨지고 있음으로 인한 품위 격하와 처우로 인해 대학의 전공자들도 타 분야로 진출 또는 이직하여 타 분야로 전직하는 경향이 높음

자격증 취득경로	대학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기타 (외국 대학)
2009년 기준(전국) (자료:한국사회복지사협회)	56,844명	11,682명	27명

### 자격증 취득경로

대학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대비 공평성에 위배됨

대학에서 2년 또는 3년간 학위취득을 위해 시험과목 외의 심리학 등 전문과목을 이수하나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마련된 과목만을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이수 개월에 마치 하고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은 대학의 전공자에게는 교육비로 들어간 비용만을 비교해도 공평치 못함

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은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는 목적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등의 저촉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조건부로 시행되고 있음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은 특정 단체 또는 특정 분야의 직무교육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증화 교육이 되어야 함 예 운전면허증 제도

사회복지 현장에 2년 이상 종사한 사회복지사와 1년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와는 엄격히 차별화 되어야 함으로 사회복지사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 필요

시간 수혜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여건상 근무지 외에서의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으로 이에 대한 환경적 개선과 교육비 지원을 통해 보다 전문가로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자질향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대안제시

서울시와 인천시는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내 성남시에서도 지원함에 따라 교육비지원을 경기도내 사회복지사 전체로의 확대가 요구됨

열악한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교육이 있어도 자신의 직무상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조인력지원 등 현실적 대처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사회복지전문가 관리시스템 도입

### 필요성

보육교사 약사 간호사와 같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력관리 전 이직 관리 교육이수사항 관리 상별 관리 등 종합적 관리를 통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및 기능수행 관리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관리시스템 도입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자세확립과 소속감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상승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직 자격을 소지했다고는 하나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자격의 유지에 적절치 못한 법적문제 등이 발생해도 상 별 할 수 있는 사정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전문가로서 품위유지와 지식 및 기술을 유지 습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고 현장경험이 전무한 자도 누구나 복지시설을 개설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대안제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과 예산지원이 요구됨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더욱 발전시키기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며 상 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때 보다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능력개발을 독려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연수원 체제 도입

### 필요성

-

### 현황 및 문제점

자격증 취득 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은 정도를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약 의 경우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상

철저히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짐

학교교육과 현장의 실무와의 괴리감으로 인해 많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음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도입으로 학교교육 이론 외의 실무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없음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복지발전을 꾀할 수 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

수혜자에게 퍼주기 식의 제정당비가 아니라 유효적절한 서비스와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함을 인식해야 함

공무원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누구나 그 직무에 대한 효과를 상승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은 이루어져야 함

## 대안제시

사회복지연수원이 성립될 수 있는 건물확보에 대한 예산지원이 요구됨

공무원연수원과 같이 정기적으로 단계별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경력 관리자급 연수 또는 직급별 연수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해 집 경기도공무원연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이루어지고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는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

노숙인을 요즈음은 다른 외국의 경우를 들어 홈리스로 칭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욕구에 쌓여 있다

여기에서 포괄적인 욕구란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결론지어 지게 된 점

사회제도 즉 복지의 안전망을 제대로 발굴하고 시행하지 않아 헛 점이 발생한 점등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욕구를 종합해 볼 때 우리사회의 노숙인복지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숙인 홈리스는 우리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복지율의 잣대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년의 노숙인복지정책의 각고의 노력은 작게나마 그 빛을 비추고 살리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 비전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이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완된 사람을 살리는 경기도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숙인의 제를 발의해 본다

## 주거복지 경기도민 노숙인 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권확보를 입법화하자

### 근거

헌법 제 조 항에 의하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지방자치치를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법을 들어 표하지 않고 통칭 의 식 주 라고 한다 그만큼 사람의 기본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사람의 기본권으로서 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밥먹고 옷입는 것 잠자는 것은 그러므로 곧 인권이다 그러므로 홈리스 그야말로 집을 잃어버

린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인권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흔히 의식주의 해결을 인권의 가장 최하위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표출 출산 교육 가정 문화 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주거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의지가 필요하다

### 가능성

매년 경기도시공사를 통하여 전세임대사업 재건축매입임대등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극히 비현실적이고 생색내기에 그친 아주 미흡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보금자리 주택 시프트등 이러한 것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현실화되고 서민화된 주거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민 노숙인 의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집이 없어 떠돌아 다니고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숙인들에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 요구

- 경기도 차원의 주거복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 경기도에 주거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뉴타운 재개발등의 개발위주의 주거정책이 아니라 서민지향적이고 도민지향적인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수립하라
- 노숙인등을 위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 운영지원을 현실화하라

### 근거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복지는 수혜자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에게 이질적이고 피로감만 증폭되게 할 뿐이다 운영과 지원에 현실화를 통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노숙인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 요구

- 급식비와 의료비를 현실화 해야 한다
- 운영비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
- 실무자인건비를 현실화 해야 한다
- 기능보강에 대한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

## 노숙인자활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근거

리스타트로 대표되는 노숙인자활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수 많은 노숙인들이 넓게나마 희망을 바라보았고 노래할 수 있었다 사람이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고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를 밝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요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에 노숙인문제의 가장 핵심인 자활을 위한 방법과 제도도입 및 개선은 우리 사회를 밝게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좋은 방법과 의지만 가지고 자활을 꿈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중복된 노숙생활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자활사업에 모습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자활을 위한 노력은 행정의 한계 자원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그러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적극적인 자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방법 나아가 사회적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다

### 요구

노숙인자활지원조례를 수립하여야 한다

노숙인자활지원체제를 보강해야 한다

지자체의 저소득자활사업에 적극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노숙인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 기타 노숙인시설의 제반문제사항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차이점 문제 제도적 지원의 차이  
급식비 최소화문제 타 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급식비  
지방화에 따른 이기적인 노숙인복지문제 중앙정부로의 회귀촉구  
시설의 기능보강문제 시설기준대비 열악한 운영주체  
노숙인인식의 문제  
연합회 지원문제

## 부적응 시설 학교 사회 아동 영역별 전문보호치료시설 설치운영

### 필요성

영역별 보호치료시설의 부재

현재 경기도아동상담소가 학교·사회·시설 등의 사회부적응 아동의 상담 및 치료시설로 기 운영 중이나 영역별 성폭력 학교폭력 비행 정서적 장애 등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보호를 통해 또래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또 다른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

부적응아동의 확산

이러한 보호치료시설의 부재로 더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함은 물론 이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회부적응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보호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전문보호 치료시설	시설수 (직업훈련)		(1)			(1)					
	보호아동										
보호 치료시설	시설수	10	1	1	1	1	2	1	1	1	1
	보호아동	477	77	42	35	142	46	24	54	28	29

도내 사회부적응아동 현황

--	--	--	--	--	--	--	--	--	--	--	--

### 대안제시

부적응아를 위한 영역별 전문 보호치료 기능을 가진 시설 개소 이상 설치운영  
기 상담치료기능을 하고 있는 도 아동상담소 역할 강화  
아동복지시설 개소당 상담사 혹은 치료사 인 배치

##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필요성

요보호 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특기 적성을 살릴 기회의 상대적 부족

일반아동에 비해 진로준비를 위한 학습 기능향상 프로그램의 전문적 수학교육의 기회가 부족

자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모델링 없이 사회적응에 필요·충분한 경험 없이 사회로 진출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역기능초래

퇴소와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자기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지만 일반가정의 지지를 받은 아동과는 달리 자신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기도 함

미국의 경우 만 세가 되면 개인별 자립준비사정 사례계획서비스 등의 자립준비프로그램이 법제화되어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제도적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도내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현황

구분	대상아동(명)	지원아동(명)
2010 자립프로그램	1,179	1,005
2010 대학입학아동입학금	48	39
2010 대학재학아동등록금	61	0
2010 자립관	0	0
2010 직업학교	0	0

### 대안제시

년 말까지 초 이상 전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실시  
대학입학아동에 대한 입학금 이외에 등록금 추가지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자립관 다수 건립  
직업학교 운영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교육 직업교육 사후관리



## 지역사회아동보호 강화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한

### 필요성

전통적 고아 감소

가정적 환경양육 우선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가정사회 보호시스템을 강화의 의지로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공동생활 가정의 확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욕구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향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아동양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동 일시 및 단기 보호 인터넷 중독 및 아동 성장·양육에 따른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전문심리상담센터 등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진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관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

지역사회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요보호아동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아동의 복지 증진 욕구를 수용하여 아동복지센터가 그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함

유휴 인력 및 공간 활용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 거점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도내 개 시군에 개소가 있으며 추후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강화시스템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인적·물적·환경적 유휴자원이 늘어나게 됨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공간을 지역아동복지센터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아동 단기 및 일시보호 방과 후 보호 아동상담 독서실 및 컴퓨터실 개방 체육시설 및 놀이공간 제공 지역사회 주민회의장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 및 부모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구심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관련 사업의 체계화 필요

현재 각 단체의 이익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체계없이 생겨나고 있는 각종 아동복지관련 기관을 네트워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하고 그 협회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짐

요보호아동의 발생에서부터 상담 보호에 이르기까지 그 처리과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여 예산지원 및 중·중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대상자 또한 중·중 시달리지 않고도 원하는 지원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각 단체의 이익에 끌려가지 않고 민관공동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년 월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구분	계	아동일시보호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개소	29	2	4	23
보호아동수	1950	88	223	1,639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년 월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주거형태 현황

구분	계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복도식건물	혼합형
개소	29	11	5	12 ※ 영아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포함	1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년 월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고유업무의 운영현황

구분	계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개소	9	5	1	1	3 ※ 지원없이 시설내 자체운영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년 월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현황

구 분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개 소	22	22	438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 대안제시

조례제정 등 정책적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적극추진  
 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의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  
 한 종합서비스시설로 적극 추진지원 예산 인력 시설 등  
 아동시설의 공간 및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아동복지기능강화  
 기존 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램제공 등의 기능을 정책적으로 추가하여 아동시설의 기능다양화 적극 추  
 진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 수렴 기회마련

## 어린이회관 건립

### 필요성

가정 양육 환경 개선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가정사회  
 보호시스템을 강화의 의지로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공동생활  
 가정의 확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욕구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향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아동양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동 일시 및 단기 보호 인터넷 중독 및 아동 성장·양육에  
 따른 교육 및 문제해결 등의 욕구가 나날이 증진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관지원은 경기도에 전무함  
 지역사회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요보호아동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아동의  
 복지증진 욕구를 수용하여 어린이회관이 그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기도는 여성회관 비전센터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다수 운영 중  
 아동 관련한 기관은 전무

년 월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구 분	계	아동일시보호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개 소	29	2	4	23
보호아동수	1,950	88	223	1,639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년 월말 현재 서울지역 어린이회관

구 분	계	강동	강서
어린이회관	2	1	1

## 대안제시

조례제정 등 정책적으로 어린이회관 순차적 건립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의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  
동을 위한 종합서비스시설로 적극 추진지원 예산 인력 시설 등  
아동시설의 공간 및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아동복지기능강화  
기존 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  
램제공 등의 기능을 정책적으로 추가하여 아동시설의 기능다양화 적극 추  
진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 수렴 기회마련

## 공통의제

### 복지경찰 음부즈맨 제도 도입

#### 필요성

현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연금 수당 등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전달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입소자들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침해와 학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활동이나 구제활동이 미미함

#### 현황 및 문제점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당이나 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일  
선 사회복지 담당자에 의한 횡령 등으로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년부터 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보  
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액은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음  
생활시설을 비롯한 시민 가족에 의해서 자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함

#### 대안 제시

정부의 공적보조를 받는 수급자와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가족에 의하여 보호  
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정보를 종합하여 사례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들의 현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는 사회복지 매니저 음부즈맨 을 읍면동 별로 임  
명하여 인권침해 및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하고 보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

## 장애인분야 의제

###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확충

#### 필요성

장애인 중에는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노인장기요양법에 노인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령상태인 1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 미국의 경우 1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기요양법의 대상임

1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요양 절대 부족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이 많아서 차상위 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 시 이용부담 과중

시설이용료에 대한 자부담 가중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1만원 서민 중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 1만원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부족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충에 어려움

경기도중증장애인 현황 2019년 12월말 기준

구분	경기도 거주장애인 추정인원 기준	등록장애인현황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급장애인	세이상 노령장애인
현황	명	명	명	명

#### 대안제시

개 시군별 장애노인을 위한 시범 공동생활가정 설치 개 시군 천만원 개소 억 천만원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설치 총 개소 설치

연 도	계	년	년	년	년
설치 수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장애아 통합보육 교육 지원센터 운영

#### 필요성

장애아동의 보육 교육 정책은 통합의 기조로 가고 있는 추세이며 장애아 부모들의 통합에 대한 욕구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아보육시설과 교사들은 장애아동의 지도경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장애에 대한 진단 지도

아동 수 일반아동 부모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대처방법 미흡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적절히 준비된 통합보육은 장애아나 일반아동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준비 없이 시행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경기도는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지원교사 보육비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

으나 장애아동의 적절한 보육여건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임

통합보육은 장애아동에게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통해 장애의 극복과 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특수교육과 전인적인 유아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조기통합의 경험은 장애아동에게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일반 아동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며 또래 아동과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발달을 할 수 있음 그

리고 장차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에는 만 여명의 장애아동이 있으며 개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개의 장애아통합교육시설 개의 방과 후 시설 시간이나 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은 각각 개소 개소에 불과함 경기도 월말 기준

단위 개소 월말

구 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	휴일
전국							
경기도							
서울							

통합교육의 기회는 넓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함

### 대안 제시

장애아동통합보육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개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여 부설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함

시군 통합보육지원센터는 유아통합보육시설에 전문가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파견하여 장애아동 진단 및 교육 유아교육교사 교육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지원 및 일반아동 부모교육 등을 지원

통합보육지원센터운영 규모 및 예산

인력규모 명 특수교사 명 사회복지사 명

전체예산 억원 억X 개소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감독 강화

#### 필요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조와 제 조에 규정하고 제정 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국민경제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미미한 상황임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실적이 저조함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우선구매제도에 대하여 홍보시 거래처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과 행정편의를 선호하는 담당자의 업무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실적 기관별 실적취합자료

단위 천원


자료제공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경기도 관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약 천여 곳 이상이며 년 말 구매기관은 천여 곳으로 전체대상기관의 이하임 위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 이상이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며 실적이 있는 기관의 약 는 기관별 평균금액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대안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강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등 지자체별로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시설과 납품 협약을 맺는 운동을 전개하여 일정량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함  
정부기관 및 지자체 청사 내에 장애인생산품 홍보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 운영의 현실화

### 필요성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통합과 재활을 통한 정상화의 순기능을 실현해 나가고 그 가족에게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건강한 가족의 기능 실현 사회활동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  
최근 시설보호에서 탈시설화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의 사회적 역할은 더 중요시 되고 있음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은 년도에 마련되어 지금까지 여 년간 별다른 개정 없이 적용되어 오고 있음 특히 지역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구체화 되지 못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주 단기시설의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을 더욱 야기 시킴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에 의해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경쟁력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서비스 제공인력은 주간보호시설은 명 단기보호시설은 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명 초과 시 명을 추가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시설장과 운전기사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명의 장애인을 명의 실무자가 보호하는 상황이며 대다수의 실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업무가 가중되어 서비스의 내용이 단순보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

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에서는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 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료 징수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시설마다 이용료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육구나 납기일을 맞추기에 한계가 있음

유형 개편에 따른 경기도 개 시 군에 있는 모든 장애인직업재활들이 공통된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실천이 될 수 있어야 함

## 대안제시

개별 기관이 마케팅에 주력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생산품판매시설 포함 에서 대량의 물량을 수주하여 연계생산시설에 배정하고 생산하도록 함

생산품목이 유사한 시설을 묶어 생산설비 기술지원 등으로 대량 주문에 맞추도록 정책적으로 육성함

유형개편을 대비해 시설에만 자격기준을 갖추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시설전환에 따른 직원배치 운영비지원 생산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하는 인력을 시설 당 총 인원으로 지원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도록 요망함

경기도의 개 시 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관련한 공통된 매뉴얼 제작이 시급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지만 사업수행과정에서 일정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희망근로 추진에 대한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던가 민선 기로부터 이어져온 청년취업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 정책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 취업실적을 보인 등의 사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광역자활센터 설립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 등은 다른 시도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 사업들이며 민선 기로부터 이어져서 활동이 내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는 저소득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기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등 그리고 장애인고용사업 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분산된 정책 프로그램의 조정과 지역 특성에 따른 조정에 있다

### 정책 제안

지역사회 차원의 자활자립에는 공동체 정신과 혁신성 동기부여 의 조화가 필요하다 개인차원의 탈빈곤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자활공동체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탈빈곤을 모색한다 그러나 개인 조직차원의 혁신의지가 없는 공동체성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혁신의지와 공동체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탈빈곤과 자활자립의 일차과제라 할 수 있다 자활자립에는 당사자의 의지와 동기부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조단체 조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 공동체성에 기반한 지역 시민조직 비영리 비정부조직 의 지원 혁신성에 기반한 기업조직 사회적 기업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들 조직이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공동체 정신과 혁신성의 조화에 기반한 부분이 사회적 경제영역이다 사회적 경제영역의 활성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광의로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일부 경과



형 시장형 사회적 일자리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상당 수는 낮은 급여수준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신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적으로 적지않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적절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주거공동체 자주관리 등 민간의 자발적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와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요구한다

주거공동체 자주관리란 주거취약지역의 문제 해결을 관련기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자활수급자들의 주체적 참여가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주관리 활동은 주거문제 등 지역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로빈곤층 생활임금과 경제민주주의 실현

혁신적 지역사회 만들기의 핵심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민주주의 완성에 있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관련해서 미국 사례를 보면 1996년 볼티모어시는 최초로 생활임금을 시 조례로 규정하였다 시간당 7.25달러 최저임금을 보장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5.15달러보다 40%가 더 많은 액수이다 조례제정은 지역의 많은 단체들의 연대투쟁의 결과였다 1996년 이래 10개 이상 연대모임이 결성되어 요구운동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10개의 새로운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확산되었다 연대운동조직은 건강보험 이민자 권리 생활임금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운동 관심을 넓여가고 있다 지역의 변화는 연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여 2001년 선거에서 애리조나 등 8개주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 인상하는 국민발의안 투표가 통과되었으며 연방하원에서 2002년 1월 회기에서 일내 최저임금액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2003년 대선에서 보편적 건강보험 법안을 공약화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생활임금운동의 성과를 보면 대표적 경제정의운동으로 10개 지방정부 100만 명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진보연합 결성 경제정의 의제를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경제정의문제가 국민운동으로 공적 논쟁의 핵심주장은 만약 최저임금이 기본 생활을 보장 못한다면 또 다른 공적 지출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 재정 지출이 된다 이 문제 해결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득의 문제는 경제적 이슈이자 도덕적 이슈로서 임금 결정에는 시장의 원리에 더하여 정부의 개입 최저임금 생활임금이 필요하다 지방의 변화가 중앙의 변화를 이끈다 생활임금 반대 세력도 있다 상공회의소 음식적협회 언론 시장 소매상 등 실업초래 서비스 가격 상승 납부자 부담 증가 등 협박 관련된 실제 증거는 거의 없다 생활임금운동은 경제정의운동으로 확대 발전 생활임금조례 모니터링 최저임금 개선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확산 등 경제정의운동으로 확산

## 사회복지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년부터 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복지예산의 확대는 물론이고 복지예산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직접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형태이며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동체주의 이념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자체만의 예산편성권 발동을 저지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유발함으로써 지자체의 전횡을 방지하는 방식이 된다 궁극적으로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 동안 복지예산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한 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사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시도되고 있다 나아가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경제개발 중심의 예산을 사회적 서비스 중심의 예산으로 바꾸는 대안 예산 만들기 운동이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등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의 본래적 의미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 분권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외에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과정에 장애인 노인 등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공과 민간의 전문인력 활용

사회복지업무 성과의 핵심 변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인력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분야 업무 전담화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지방정부의 고유 업무화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경기도 일반행정 조직 내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다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방자치체가 본격화되면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바우처제도 확대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현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담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일자리 사업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 사회복지 일선행정체계의 우선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일선행정체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의 일차적인 성공의 관건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셋째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협조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독자적인 행정체계 하에서는 정부 담당 업무 중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들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조직과의 협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관계를 역할 분담 업무의 구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민간기관에 대해 권한과 의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명확한 계약관계에 기반 하여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보수 수준 역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실무자의 처우는 공무원 및 다른 휴먼서비스 종사자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특히 자활지원 주거복지와 노숙인 복지 등 일부 분야에서의 종사자들은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처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보완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반인 각종 사회서비스 시설의 확충과 운영 보완이 요구된다. 사회서비스 시설 전반에 대한 연차별 확충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 장애인 위한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 자립생활 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의 확충 및 운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치매중풍노인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지역 편중을 완화해야 하며 시설 확충과 운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는 학대아동 방임아동 사회부적응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의 정서심리프로그램 학습지원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이 필요하다. 또 하나 보완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는 아동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정체성을 갖는 청소년들에 대한 광역단위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급 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시군구 단위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청소년 보호 치료센터 권역별 설치 청소년 직업센터 설치 혹은 청소년 자활지원관 추가 조치 등이 요구된다. 청소년 분야 과제 설정시 역시 사업의 적절성과 구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지역복지분야

### 들어가며

민선 7기 경기도 사회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공약을 발굴 제시함 공약은 지난 민선 6기에 추진되었던 지역복지 및 전달체계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안함

## 경기도 지역복지 평가

### 무한돌봄사업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도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위기해소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인 이하의 소득기준과 대도시 기준 10만 원 중소도시 8만 원 농어촌 6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만 원 이하 등의 재산기준 이하에 속한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6개 항목이 포함된다.

2017년도 상반기 총 지원액은 1,000억 원으로서 총 10만 명이 신청하여 10만 명이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도 지원비율인 10%에 비해 약 2배 상승한 수치이다. 지원내용별로 살펴보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각각 1,000억 원 와 1,000억 원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10%가 최저생계비 1인 미만의 차상위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27> 무한돌봄 지원 현황

구분	상담 문의	신청	지원	지원액 억 원
실적 누계				

- 1) 소득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이하에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가구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은 182만 명으로 추산됨.
- 2) ① 위기상황<sup>1)</sup>이지만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② 긴급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실직, 사업 실패로 위기상황을 맞은 가정, ③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3) 의료비(제한 없음), 교육비(수업료, 학교 운영비 미납분, 입학금), 주거비(493천원/3~4인-월), 사회복지시설 이용(406천원/1인-월), 연료비(월 100천원/가구),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1회 500천원).
- 4)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2009. 3. 12)

## 현재 지원 가구수 누계

자료 경기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이같은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침체기라는 시의성을 반영한 상황적응적 특성을 가진 사업으로 대상 및 급여의 포괄범위가 중앙정부의 제도보다 넓고 단시간 내의 지원결정과 장기적 지원으로 사업의 적시성과 적실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한편 현금위주의 급여로 신청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는 새로운 지역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위기상황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와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후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무한돌봄센터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있을 뿐 무한돌봄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위기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시된 항목의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로 가장 많으며 소득이나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에 달한다 특히 미지원자의 명 가 재산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 정책 대안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에 많은 예산 년 현재 당초 예산 억 원 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위기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사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공공 지역관리체계를 통해 통합적 지역복지서비스망이 구축 운영되고 위기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서비스연계활동이 모니터링되는 위기지원시스템을 각 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인적물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구매체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국가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보장체계를 효율화하게 됨.

이러한 하드웨어적 시스템구축과 함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지표는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쓰여진 예산이 저소득층의 욕구에 부합했느냐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정책 대상의 확대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서 빈곤의 경계를 넘나드는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회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범위와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 경기도내 재산기준 초과자의 추정치를 고려할 때 생활필수 항목 이며 유동성을 갖기 어려운 주택과 같은 재산기준 등의 제도적 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므로써 위기상황에 대해 시급히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자에 대한 사후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야 하며 동시에 비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비지원결정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차상위실태조사 결과 재산기준 초과자는 144만 명으로 추정됨. 경기도 재산 기준 초과자는 전국 대비 경기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비율인 13.7%를 적용하여 197천명으로 산출함.

7) 핀란드, 일본,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농지, 토지 등도 생활필수 품목으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공제됨(정인영, “공공부조제도 국가간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31, 2008). 따라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상한선 범위 정도만을 적용하고 지원 여부는 위기상황 및 소득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안됨.

## 사회복지공제회 추진 사회복지인력 시설 종사자

###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사회복지부문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정되고 만족스런 근무조건은 복지서비스 효과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공제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 추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먼저 공제회를 추진하여 성과를 보여주고 전국 단위의 공제회를 설립한 후 경기도 공제회를 흡수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례들을 볼 때 그 가능성은 희망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경기도 사업의 경우 큰 성과가 나타나면서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이름 참여정부때에는 희망스타트 현 정부는 드림스타트 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어려움과 함께 일선현장에서는 추진 주체간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다

둘째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근무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사회복지사 공제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지방공무원공제회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와 이동이 잦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근무실태를 분석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복지사는 최초 진입은 경기도에서 하고 숙련된 이후에는 서울로 옮겨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 재원 및 회원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제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 추진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정책 대안

분야별 사회복지시설간 처우 수준을 동일하게  
상기 연구 및 사회복지협회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급여가 다르고 분야별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로도 차이가 있다 이는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시설유형별로 다른 처우 수준을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처우수준이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당체계인 만큼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이수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사의 인적 자원 제고를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보수교육 외에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상기 연구결과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전문적인 교육 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교육 이수 욕구 충족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을 설립하였으나 경기도의 현안대응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나가며

선거 때마다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민선 기 후보자들이 우리의 제안을 실질적인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야 당 정책협약 내용

생활연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공동체를 실현한다

고령화와 신빈곤층 증가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단순 하청행정이 아니다 우리는 지역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복지예산 비율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하고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여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 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질 높고 안정된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

희망근로사업과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중 국가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는 상시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노동정책과 환경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질 높고 안정된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흡수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필요

현황 및 문제점

표 에서와 같이 계속입원 건수 에 비해 현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주요업무를 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개 소 년 이용정신장애인 수 명 년 으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표 에서 제시한 한국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경기도는 전국사회복지시설 중 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복지 수준은 타 행정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표 계속 입원율로 인한 장기입원 현황

연도	입원방법 계속입원 치료심사건수	계속입원 심사결과			
		퇴원		계속입원	
		건수	%	건수	%
2004	75,780	1,681	2.2	74,099	97.8
2005	79,181	2,113	2.7	77,068	97.3

출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총 이용 인원	총 시설 수	이용 및 입소	주거시설
2008	4,423	173	104	69
2009(전국)	4,903	199	115	84
2009(경기도)	558(11.4%)	21(11%)	10	11

표

한국사회복지시설 현황

출처 한국사회복지시설

대안제시

임기동안 경기도 시 군 구별로 입소 이용 주거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증가

설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

### 현황 및 문제점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재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를 들 수 있다. 정신보건센터가 다음해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산정 지원하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설치 후 일정기간 년 이 지나 예산을 지원 받는 체제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증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 대안제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선 예산지원 형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 후 위탁운영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나가기도록 정책의지 강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프로그램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인당 프로그램비는 연간 원이고 월지원으로 하면 원이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원의 이용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대상자는 지침에서 프로그램 이용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서 프로그램 사용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가 수급자에게 프로그램 이용비를 받지 말라고 한다면 보조금에서 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대안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정신장애인의 프로그램비를 보조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인 월 원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연간 인당 원에서 원으로 지원

## 정신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정신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장애와 달리 정신과라는 낙인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은 정신장애인을 비경제적 인구에서 경제적 인구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취업시 초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취업이 지속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취업하여도 중도탈락의 경우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대안제시

정신장애인의 취업준비과정 및 취업 준비 초기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수급대상 정신장애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수급대상 정신장애인이 취업할 경우 수급권 탈락을 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책정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일을 위임받아 관 민이 서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해 운영비 책정시 전년도 운영비 결산 및 사업의 증 감을 고려 한 운영비 책정은 기본수행업무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직원의 년 호봉상승 조차도 고려되지 않는 강압적인 운영비를 년 째 집행하고 있어 각 사회복지기관은 지도 감독 기관과 부족액을 설명하기 위한 소모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다.

### 대안제시

전년도 사업 결산 기준에 따른 다음해 예산 책정  
다음해 예산 책정 및 사업 증 감을 고려한 정신보건사업 지침안 일부 제정



##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칭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필요성

우리사회는 지속적 경제난속에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우리사회는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일정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필요성 증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취업애로계층의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각각의 사회서비스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다양한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부서가 달라 사업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의 부족 중복성 등의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관리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소와 사회 서비스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대안제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민관 협의체 성격으로 가칭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부서 설치

센터 부설로 사회적일자리 연구센터 또는 사회서비스 연구센터를 두어 지원내용 마련과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개발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높은 주택가격은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며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없는 실정일뿐더러 주거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높지 않은 실정임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성으로 빈곤을 탈피하여 일반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에 따른 다수의 대기자로 인해 임대료 인상등 직접적 퇴거압력을 받는등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남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으로 대기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대안제시

임대주택중 특히 영구임대주택 5년공공임대주택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조 전세자금 지원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필요성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일반 산업 종사자에 비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  
이로인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직율이 높고 경력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보하기가 어려움  
특히 자활사업 종사자들은 빈곤층 주민들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등의 종사자들에 비해서도 그 처우가 매우 낮은 현실임  
이에 정부급여체계안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취약분야 종사자들과 직능 단체별 차등에 대한 차별없는 급여지급 체계가 마련될 필요 있음

### 대안제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에 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를 단일 임금체제로 현실화 하여야 함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의료공제나 상해보험마련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상설기구 설치 및 조례제정

##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

### 필요성

자활공동체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활근로와는 달리 자체 경영을 통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자활 자립의 직전단계라고 할 수 있음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지원내용은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생산품 우선구매 인건비 지원등이 있음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 세자금 지원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실정임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은 지역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데 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책정하기도 하는것에 비해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안제시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예산 책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 연구용역 수행

##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지원

### 필요성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역자활센터는 시 군 구 지역단위를 근거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설지원은 부재하다 할 수 있으며 높은 임대료 부담 낮은 관공서 건물 활용등으로 효율적인 자활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더욱이 지역내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인 시설지원이 이루어 지는것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설지원이 부재한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제고하여야 할 사항임

### 대안제시

국 공유지 무상임대를 넘어서 지역자활센터 독자적 운영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 지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분담하여 지역자활 센터 기본 운영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마련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 필요성

사회복지는 대주민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의 부족으로 인해 행정적 처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고 사업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요 구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확충되어야 하며 욕구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초기상담 및 기초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안제시

주민자치센터 및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점진적으로 배수로 확충

상담 및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을 주민자치센터와 기초지자체에 전담 배치

## 취약계층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 필요성

전국 만 천 백여개의 보육시설 중 국 공립 보육시설은 천 백 십여 개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년 기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여명으로 이중 인 여 명만이 국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지난 년동안 국 공립 보육시설은 배 증가한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배까지 증가하여 국 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 격히 감소함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빈곤이 악순 환되는 구조에 처해 있으며 취약계층 지역에 국 공립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기간 대기하거나 원거리로 보내는 등 보 육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근로여성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 대안제시

지역 내 국 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대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국 공립 보육시설 설치  
취약계층 근로여성을 위한 시간 연장 방과후 보육 등 국 공립 보육 시설 운영방식 개선

## 빈곤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교육센터 설립

### 필요성

년 자활사업이 시행된 이래 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는 배 가량 확대되어 왔음

자활근로 사업중심에서 점진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요구되어지는데 반해 지역적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시설이 부재한 형편임

또한 지역내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여 소양교육 인성교육 기능교육 자격증 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등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자활 자 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지역내 근로빈곤층에게 맞는 전문 교육시설의 설 치가 요구되어짐

### 제안내용

광역시자체별로 가칭 자활교육센터 설립 운영

기초지자체별 자활교육장 마련하여 자활교육센터와 연계 운영

## 전문노인요양시설 확대 및 저소득노인 요양비 지원

### 필요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영리단체가 폭증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 및 요양 욕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쟁체계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요양인프라의 지역간 차별등으로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국 공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계층의 경우 월 최소 만원 가량의 재가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료가 없어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사회복지 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상대적 상실감이 커져 국가제도의 미 수혜자로 남아있는 형국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함

### 제안내용

노인요양시설 확대 및 국 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저소득계층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 복지관

경기도 핵심추진사업 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등의 연속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담당직원 충원 및 정규직전환

### 필요성

경기도 핵심추진사업인 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 및 경기도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 및 연속성을 고려할 때 전담관리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년 기준 전국 홀몸노인 명에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관리인력인 서비스관리자가 명 활동하고 있음

안전확인 및 서비스 연계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특성상 대상 홀몸노인의 축적된 케이스관리와 서비스 연계이력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 이직이 많아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은 년 기준 전국 개 일자리 형성을 경기도는 여개의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공헌형 여명 인력파견형 여명 시장형 여명 전담 관리인력의 활동이 중단되는 개월간은 파견처 또는 거래처 관리의 공백이 불가피함

일자리 불안정으로 전담관리인력이 다음 연도에 재계약하지 않는 등 사업의 연속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안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노인일자리사업 형태를 고려한 전담관리인력의 계약기간 연장 및 수행기  
관당 명 이상 정규직 전환

## 경기도 노인복지관 시설규모 및 인력 배치 최소기준 마련

### 필요성

노인 욕구의 다양화 사회변화로 인한 사업의 종류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현행 노인복지관 시설규모의 확장 및 인력배치기준 마련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는 시 구 군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와 시설규모 및 노인복지관 경상보조금지원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배치가 되어사업을 진행중임  
기본적인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을 상담사업을 비롯해 개 종류 등의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이런 의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에 대한 수퍼비전과 효율적인 관리와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노인 욕구의 다양화 사회변화에 따른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회계관리인력 및 중간관리 인력의 겸직을 요하는 사업의 증가로 업무의 가중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안제시

사업의 종류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종사자 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지원  
기존 시설규모를 사업진행의 적절한 규모로 확대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의 최소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이 가장 높음 높은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재 등급판정에서 등급이 하향되어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감소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 구조는 영리시설의 경우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 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 군 구의 관심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나 비난은 시 군 구에 돌아가게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 대안제시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상황에서 노인복지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이를 통한 관계정립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노인요양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경기도노인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법인 목적 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 군 구의 관리와 지도를 통하여 행정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게 함으로써 법인보다 더 많은 민간 영리시설들에게 시설운영의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수근무수당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복지적인 소명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을 확보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가활동프로그램지원비의 확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노인복지사업을 지속하여온 비영리법인시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경기도의 노인복지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노인자살예방분야

### 노인자살 현황

지난 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자수는 배 증가 국가중 최고수준  
년 명 년 명

년 경기도 자살자수는 명이며 이중 세 이상 노인자살자수는 명으로  
차지 매년 증가 추세  
명 년 명 년 명 년

년 노인인구 만명당 경기도내 평균 노인자살률은 명  
전국 일반인

세이상 노인자살율이 회원국 평균의 배  
노인자살율 세이상이 명 대는 명 대가 명

### 노인자살의 일반적 특성

노인자살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역할 및 경제력 상실 배우자 사별 가족으로부터의 유기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  
세 이상 자살자의 가 건강문제이고 이상이 배우자 등 가족이 있었음 년 통계청  
자살시도 전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대부분 고립되어 있어 자살위기사  
조기발견이 어려움 상담전화 이용율이 매우 낮음  
노인의 경우 죽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치명적인 자살방법 선택 자살  
성공률이 로 상당히 높음 젊은층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노인이 지난 년간 자살을 생각함

### 《 도내 자살율이 높은 5개 시군 '07 ~ '08 현황》

신변비관이 77.6%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50%,  
음독이 54.5%  
남자노인이 2배







## 재가복지분야

### 재가지원서비스 확대 개선방안

#### 배경 및 필요성

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재가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가노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사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요소가 없어지고 단지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과 연계지원서비스로 운영되도록 개편되었다

현장의 상황 즉 재가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이론적인 사업은 위기상황의 노인 복지사각지대 노인 기본 삶의 영위를 위한 노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외면한 사업이며 공적서비스의 부재를 초래한 사업이다

노인복지에서 첫째 노인의 기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둘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돌봄을 통한 지원 셋째 사전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방안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맞춤형서비스

사전예방관리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신체적 건강관리 건강 체크 안마 운동서비스

정신적 건강관리 말벗 나들이 심리상담 치매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기본생활지속서비스 가사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청소 식사관리 주거환경관리 세탁 밑반찬 도시락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병원동행 간담부름 이 미용 등

위기상황대처서비스 위기 상황 시 지원서비스

갑작스런 사고 질병 발병 한시적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사고 시 정서적 안정과 동행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개인 욕구별 프로그램 실시

후원 및 결연사업 등

## 인력 현황

구분 \ 직책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	심리상담사	사무원	유급봉사원
재가지원	1	1		1	
확대·개선안	1	2	1	1	5

## 은빛사랑채 기능강화방안

### 필요성

지난     년 경기도는 치매 및 중풍 어르신을 극진히 모시는 마음을 담아 그 옛날 사랑채라는 공간을 통해 서로 함께 위로를 느끼고 작은 나눔이 오가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은빛사랑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주간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소득계층 구분 없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터     까지 케어라는 파격적인 운영을 통해 노인 당사자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의 부담까지 공공의 책임으로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운영목표를 가지고     년까지 총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경기도 전역에 총     개소의 은빛사랑채를 개소함으로써     명의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케어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과정 중에 있었다

### 현황 및 문제점

그러던 중     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라 주 야간보호 서비스의 운영책임을 민간으로 완전 이양함으로써 은빛사랑채 운영계획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으며     개까지 개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개소 지정에 그치게 되었다

물론 민간의 사회복지영역 진출을 허가함으로써 경기도 내의 절대적인 주 야간보호센터는     년 월 말 현재     개소와 주간보호 이용노인     명으로 경기도의 은빛사랑채 운영계획보다 확대되었지만 그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인 부분은 기관별 격차가 크고 은빛사랑채 운영목적과는 상이하다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입소인원     인 기준으로 비현실적인 보조금 차등 지급 등으로 그나마 은빛사랑채 정신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누락 없이 유지를 하려던 기관들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관을 폐쇄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려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의 경우는 이른바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기도의 은빛사랑채를 모델로 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를 운영함으로써 재가복지사업을 공공의 책임영역으로 인정하고 실천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선구적인 노인복지 모델인 은빛사랑채가 그 정체성을 잃고 있는 부분은 제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 대안제시

이에 경기도는 은빛사랑채가 추구하던 어르신 안전케어 및 부양가족들의 부양 부담 경감이라는 재가노인복지 정신과 그에 따른 공공영역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기존 은빛사랑채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복지 경기도의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은빛사랑채 기능강화 안 을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잠재적위험군 천명 고위험군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완료 및 예산 증액**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청소년의 위기 예방 및 지원강화 필요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 기존 자원의 역량개발 극대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년 이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청소년지원센터를 허브기관으로 도는 국비 및 도비 시군은 국비 및 시군비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하 를 구축 운영 중

년 현재 도센터를 포함 개 년 개 신설 포함 시군에서 을 구축 운영 중이나 시군지원센터의 경우 센터당 천원 국비 시군비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한계 발생

미설치 지역의 개 시군 경우는 그나마도 소외되어 있어 지역별 청소년 복지의 수준의 편차 발생

최근 년간 경기도내 청소년의 학업중단 가출신고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자살 등의 위기 통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년 도내 위기청소년 통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8월)	비 고
학업중단	22,357	23,043	13,600	교육청자료
가출신고	2,775	3,651	2,568	경찰청자료
학교폭력	5,213	5,903	3,497	"
청소년범죄	22,989	26,295	18,906	"
자 살	175	180	-	통계청자료

년도 경기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인구 세 총 천명 의 천명 가 고위험군으로 분류

고위험군 천명 즉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안제시**

개 시군으로 구축 확대

운영 강화를 위해 현재 국비 시군비로 운영되는 지역별 예산을 천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내실화 추진

##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지역 및 인원

**청소년동반자**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 기관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청소년이 접한 환경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상담 프로그램 임

### 필요성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출 학교폭력 왕따 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기관 내방에 소극적인 위기 청소년 특성 상 찾아가는 상담자 필요

위기 청소년의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마련 필요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이 넓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위기청소년이 지원을 받기 위해 기관을 내방하는 것에 어려움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도센터를 포함 개 시군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반자 사업 운영 중임

청소년동반자는 안에서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인력이며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및 도시의 확대로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증가하나 현 동반자 인원으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적정인원 확보 절실

### 대안제시

전체 시군으로 동반자 확대 및 도 및 시군비 확보를 통한 인력 증원